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일 협력’ 국제학술회의 참가후기 *

배 정 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이명박 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의 전반적 분위기

지난 5년간 한·일관계는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새로운 한일관계의 확립 기회로 인식하며 기대하고 있었다. 아시아 중시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후쿠다 정부는 물론, 일본 지식인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도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통일연구원」이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일 협력’을 주제로 도쿄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 학술회의에는 일본 자민당, 민주당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학계, 언론계, 관계 등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한국 언론에서 ‘한반도 전문가 총출동’으로 표현하였듯이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교수, 와다 하루키 동경대학 명예교수,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 현립대학 교수, 이종원 릿쿄대학 교수 등 일본 학계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아시히 신문」·「요미우리 신문」·「니혼게이자이 신문」·「마이니치 신문」·「교토통신」·「NHK」 등 주요 언론기관의 한반도 담당 논설위원들도 높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정권교체에 대해 이념적 편향에서 실용주의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었다.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견해

일본측 전문가들은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대체로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총평을 하였다. 즉 일본측 전문가들은 가장 핵심적 과제로서 ① 핵문제 인식, ②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 ③ 국군포로 송환 언급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본격적 대북지원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강력한 레버리지를 쥐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측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세부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본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그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특별기획 국제학술회의의 일환으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한일정책포럼’(2008. 1. 22)의 참가기임.

첫째,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핵문제의 해결이 관건인데,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빠른 시일내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과 물질·무기·확산활동을 포함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는 북한의 체제유지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국가기밀이므로 핵시설의 불능화보다 더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일본측 전문가들은 핵 문제의 해결이 매우 어려우므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세부적 실현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신정부가 북한의 개방을 중시하고 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를 크게 경계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북한의 개방·개혁을 지향한 상호주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이라크 정세의 안정화로 미국의 대북정책 노선이 강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이다.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조건을 더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측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북한을 위해 조성할 국제협력기금 400억 달러 가운데 일본의 보상금 100억 달러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일본 인터넷상에서 반발이 컸음을 언급하면서, 일본이나 북한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함을 지적하였다.

3. 일본측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일본측 전문가들은 북한문제, 한·일 관계의 개선 및 성숙화를 위해 한·일 고위전략대화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가. 입구론에서 출구론으로 전환

일본측 전문가들은 아베 전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납치문제를 입구에 두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이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측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입구에 북핵 문제를 두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출구에 두기를 제언했다. 또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의존관계 심화, 미·일·중·러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상호 의존관계 및 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언했다.

나.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대북 압박 활용

일본측 전문가들은 ‘당근과 채찍’의 이중노선을 수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대북 압박에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즉 북한에 대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실천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 북·미관계 개선의 전략적 지원

일본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라크 정세의 안정화로 대북정책 노선을 강경으로 전환하여 북한에 대한 요구 조건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반면, 부시 대통령이 임기내 외교실적 도출을 위해 북한과의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요구조건을 높이지 않도록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북·미관계 개선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 요구조건이 완화될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